

# 전북 공유대학 1차 300명 모집에 352명 신청

###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등 영향으로 인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한 '전북새만금역(JST) 공유대학' 학생 모집결과 모집정원 300명에 352명의 학생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공심화과정 270명, 기초전공과정 60명으로, 전공심화과정은 소속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기초전공과정은 전공과 관련 없는 비이공계 학생이나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모집결과 전공심화과정은 미래 수송기학부 103명, 에너지신산업학부 67

명, 농생명·바이오학부 130명 등 300명이 신청했으며, 기초전공과정신청학생은 52명이다.

JST 공유대학은 학부별 3개학과로 구분되며 미래수송기학부(친환경미래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SW, 특수목적수송기기)와 농생명바이오학부(디지털농업, 푸드테크, 메디컬바이오)는 학부 내 3개 학과에 고르게 모집이 되었으며, 에너지신산업학부(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최근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등의 영향으로 이차전지 학과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차 모집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하여 2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유대학은 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군장대, 전북과학대 등 모두 10개 대학이 참여, 지역 핵심분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대학이다.

참여학생 전원에게 '혁신인재장학금'이 지급된다. 복수전공 학생은 월 50만원씩 학기당 200만원, 부전공 학생에게는 월 30만원씩 학기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월 20만원씩 학기당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혁신인재장학금'이 추가 지급된다. 복수전공은 성적별로 최우수 100만원, 우수 75만원, 장려 50만원 부전공은 최우수 75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공유대학 설계 초기인 올 여름, 공유대학을 앞서서 운영 중인 타 지역 방문 시에, 6개월 만에 공유대학을 개강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3월 개강을 목표로 도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학생 모집에 성과가 거두었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북자치도, 2월 1일~4월 30일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문자나 ARS(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신청할 수 있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에는 특히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을 댔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촌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면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최대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훈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 1일부터 도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돕기 위해 청사 내에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희망법률상담실'에 설치된 상담소에서는 일상생활 속 각종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의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하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현직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전문적인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지방세와 국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등 세금 고민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2322)로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도청 상설상담소 운영과 더불어 시군 농공단지를 방문해 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세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차지행정국장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이용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에서도 76명의 마을세무사들이 전화·방문 등 상시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마을세무사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 26일 전주 라루체에서 열린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정기총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의 성과와 미래'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2024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정기총회 성료

### '새만금의 성과와 미래' 주제 김관영 도지사 특강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지난 26일, 위원회 이사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정기총회를 전주 라루체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3년 위원회 예산결산 및 24년 사업계획 보고, 신규 이사진 선임과 새만금의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새만금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관영 도지사가 특강을 발표했다.

정기총회는 이사장 개회사, 2023년 사업에 대한 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보고, 신규 이사진 위촉장 수여, 김관영 도지사 축사 및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은, 인사말씀으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새만금의 발전과 질 좋은 정착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비전인 미래의 땅 새만금이 하루 빨리 조성되길 바라며, 전세계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새만금의 도약을 위해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전을 건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김관영 도지사는 "1월18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이름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 선도적으로 주도하며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을 것이고, 새만금 국제투자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이제 새만금은 비상할 준비를 마쳤고, 새만금 연계교통망 확충 등 핵심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및 여론형성, 정책개발 및 자문,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홍보 등 민간부분 활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출범된 사단법인 단체다. /김재훈 기자

## 정당현수막 일제 단속·정비

### 전북자치도, 제도 개선사항 조기 정착 위해 관계기관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 26일부터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실시하는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계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는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

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자치도는 시·군에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과 적용배제 정당현수막 판단요령을 알리고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 정당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하고,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수 전북특별도 건설교통국장은 설명평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